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일반 국고 추진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수소경제 활성화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임시회를 열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일반 국고사업 추진을 비롯해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제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에서 연간 약 18만 톤의 해양쓰레기 발생으로 선박사건, 어업생산성 저하, 바다생물 폐사 원인 등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배정, 지방비를 50% 부담하다 보니 예산확보 어려움과 해양 폐기물 처리 시설 부재로 폐기물의 노지 방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일반 국고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율도 7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 1월 발표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뒷받침 돼야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학생건강체력평가(1~5등급) 결과 초중고 순으로 4.5등급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최근 3년간 학생건강 체력 등급도 점차 나빠지고 있다며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

터 실시 중인 신체능력검사를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배치도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서 매년 430여건의 산불로 670ha의 산불피해를 주고 그 시기도 연중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 인력의 근무기간 연장 및 정예 진화인력 배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배치하고 선발, 운영자를 현행 산림대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고용기간 연장 및 운영 예산은 일반 국고사업으로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전망대 둘러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북 회장 최고위원회가 20일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마친 황교안 대표가 전망대를 둘러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 후보 교체... 군 출신 재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김제 진봉면 심포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를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서 추천했다"며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조사위원은 군 경력자에서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위임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조사위원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무추장으로 알려졌다. 권 전 사무처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육군 수도군단 군단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월 권태오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미달을 들어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뉴스1

경찰권한 분산... 외부통제 강화

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수사본부 신설 추진 → 관서장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국가인권위·경찰위 권한 대폭 강화 → 외부 통제 마련
정보경찰, 활동범위 규격화·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당정청이 경찰개혁과 함께 논의되는 경찰개혁에 있어서 권한 비대화 등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개방형 수사본부장직 신설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를 열고 이때까지의 성과를 확인, 향후 개혁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경식 정책위의장, 인제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조경식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경찰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위해 개방형 국가수사본부장직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형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

경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 인한 권력 비대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달 중 시범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6월 평가기준을 확정, 설명회와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 10월 말에는 시범운영지역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기존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통제, 주요 정책 및 법령, 예규 등 심의를 맡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활동규칙을 만들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경찰의 수사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심사문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자체적인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 개혁과 발취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

도의회 예결위, '지진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등 12건 삭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전북도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친 예산안 심사로 총 33590689원 규모의 전북도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지진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1억2480만원' 등 12건 8억745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예비비)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회부된 상임위 삭감사업 '취창치 구립 지원' 등의 사업은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해 의결했고,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소통·육군·동계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따른 불품

구입비(1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119 지역대가 하반기 차공예정으로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으므로 공사 추이를 살펴 불품구입 예산은 차후에 반영토록 요구하며 삭감했다.

도민안전실의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1억8000만원)'은 무더위쉼터(4795개소)에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외에 별도의 파라솔 설치보다는 실내 에어컨 전기료 사용료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고,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1억2480만원)'은 개당 80만원인 안내지도만 510개를 제작해 설치하는 것에 효과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이보다는 대피장소를 휴대용 어플이나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삭감했다.

복지여성보건국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1000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40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민족의 독립정신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내용 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주요 이슈였던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업 8건의 166억원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사업 22건 383억원 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당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다.

김대오(익산)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